서울시 공무원 시차출근제 시행… 역학조사반 4배 확대

시내 2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관리기관에 서울의료원·서남병원
광화문 불법집회시 시설물 철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장 역학조사반 확충, 직원 시차출근제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 역학조사반 인력은 기존 4개반 24명에서 16개반 96명으로 4배 확대 운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현장 역학조사반'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며 "확진자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실시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력과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서울시 공무원은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한다. 출퇴근 시간 조정에는 25개 자치구와 시 투자·출연기관 등 총 4만2000여명이 참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박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력이 아주 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노출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소재 기업,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도 시차 출퇴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는 ▲현장 역학조사반 확대 운영 ▲대중교통 시설 혼잡도 감소를 위한 시차출근제 도입 ▲고위험 우려시설 중점방역 및 밀접접촉자 관리 ▲재난대응체제 강화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재난특별방송 체제로 TBS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내 25개 보건소는 기존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운영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 시민까지 진료 대상을 확대해 민간병원에 코로나 의심환자 접근을 차단,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413개 병상을 확보했다. 앞으로 총 900병상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는 어린이 전용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어린이집 5705곳, 초등돌봄시설 495곳, 문화체육시설 73곳은 휴관에 들어간다. 어린이집은 3월 9일까지 2주간 휴원한다. 가정 양육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당번 교사 등을 배치한다.

잠실실내체육관, 고척돔 등 15개 시립체육시설은 이날부터, 시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문화시설은 25일부터 폐쇄된다.

아울러 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과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방역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 소재 신천지교 교회 및 부속기관 170곳 중 163곳에 대한 폐쇄와 방역을 완료했고 시민 제보가 들어온 신천지 관련 시설도 폐쇄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설 폐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밀접접촉 우려가 높은 신도들에 대한 관리"라며 "현재 신천지 측에서 서울시 내의 신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자발적으로 신도 명단을 제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고령자들"이라고 지적하고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2월 29일과 3월 1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설물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주 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 등 신원 특정이 가능한 사람은 물론, 신원 불특정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채증된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광화문광장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공공일자리 푼다

방역, 외부 실태조사 등 1700개
하루 6시간 근무기준 5만2000원
"민생경제 조속한 회복 도모"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170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 6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방역 등 공공일자리 사업 분야 1300여명(환경정비, 보건소 사무보조, 물가·소방분야 외부 실태조사) ▲관광·문화예술 분야 300여명(명소안내, 공연장 질서요원) ▲소상공인 분야 100여명(재래시장 환경정비, 주차요원)이다.

근무 기간은 3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관광정책과(관광명소 안내 요원), 서울식물원(전시장 운영지원), 자치구 주민센터(방역·환경정비 분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은 5만2000원이며 부대경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근로시간과 급여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선발한 1000여명을 어린이집·버스정류장·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1만곳의 집중방역에 투입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코로나19 관련 공공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업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보행로처럼 '공간혁신'

606곳에 과속단속 CCTV

서울시는 내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을 위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 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법 개정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2022년까지 이 구역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은 연내 모두 폐지된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 CCTV를 50대 늘려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

시는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을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에 320개 구간을 새롭게 추가한다. 또 횡단보도 67곳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으로 칠해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센터·분소 관리〉

지역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구로동	고척동
기관	주민지원센터	분소	분소	분소	주민지원센터
인력	4명	1명	1명	1명	2명
범위	서남권 총괄 (고척 제외)	강서구 피해 및 인근지역	금천구 피해 및 인근지역	구로동	고척동
비고	분소 관리총괄	해당 지역 관리 (양천 주민지원센터 업무추진 지원)			해당 지역관리

/서울시

소음에 잠 못드는 서남권에 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 1개소, 분소 3곳 추가
총 10억4500만원 예산 투입
간담회 개최, 소음교육 업무 등

서울시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서남권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센터를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고 분소 3곳을 신규 설치한다. 올해 총 10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10월 이호대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항공소음 영향도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비슷한 정도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건의한 이유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할 때 권장하는 단위) 이상의 소음피해대책 지역을 70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구로구 고척동에 주민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구로동과 금천구, 강서구에는 분소를 만든다. 주민지원센터와 분소는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간담회 개최와 주민 의견수렴 ▲소음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는 소음측정과 연구 업무 등을 맡는다.

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양천구에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피해주민 지원 및 편의 확대를 위해 구로구에 주민지원센터 분소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단체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자치구마다 각 1개 분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구로동의 경우 고척동과 갈등이 있어 별도의 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기존 공항소음대책지역 13.1㎢(15만6222명)에서 인근지역을 포함해 13.5㎢(25만9448명)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2016년 양천구에 개소했으나 양천·구로·강서구를 전부 전담하기 어렵고 강서구, 구로구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김포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고척동 주민 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